

[보도자료]

이 자료는 2009년 10월 23일(금)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동성폭력의 양형과정에 전문가참여 확대 통해 감형 신중해야
- 아동피해자의 진술녹화제도 개선 통해 2차 피해 발생 줄이고,
아동성폭력 범죄자 출소정보 통지제도 도입 필요해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『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』제시

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.

배 포 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배포 날짜 : 2009년 10월 23일(금)

언론 담당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

(연락처: 02-3156-7296, 이메일: aeri2008@kwidimail.re.kr)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)은 최근 『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』을 통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했다.

□ 아동성폭력사건 해마다 증가

- 최근 조두순 사건을 비롯, 일련의 아동성폭력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음

- 파악된 아동성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, 2008년에는 1200여건이나 발생했음.

⇒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6%정도임을 감안하면 실제 사건은 2만 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

□ 범죄 사안에 비해 처벌 관대, 처벌효과 미약

- 아동성폭력사건은 법원의 선고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, 무기징역은 거의 없는 관대한 처벌 보여.
- 이러한 관대한 처벌의 배경에는 법원의 감형사유가 크게 작용함. 2008년 법무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『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 보호대책』 보고서에 따르면,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된 아동성폭력범죄 28건에 대한 판결분석 결과 감형사유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음.
 - 동종전과없음 16건, 범행자백 11건, 고령·미성년 10건, 범행반성 10건, 합의 5건, 음주와 가족부양 각각 3건으로 나타남.

<표 2> 아동성폭력 범죄 감형사유

감형사유	건수
동종전과없음	16
범행자백	11
고령·미성년	10
범행반성	10
합의	5
음주	3
가족부양	3
재범가능성 없음	2
고소취하	2

자료 : 경향신문 2009.10.9

□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양형 시스템 필요

○ 아동성폭력이 법정형은 높으나 실제 양형과정에서 감형되는 일이 많아 중형으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.

- 법원은 ‘음주’를 심신미약 사유로 보는 것을 재고해야 하고, ‘재범의 가능성이 없어서’의 경우도 실제 전문가 참여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판단에 근거해야 함.

- 이와 같이 특히 미성년 피해자 감경사유에 대한 전

문적이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, 형사소송법상
판결 전 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.

□ 아동피해자 2차 피해 및 재범 피해 방지위한 제도 운영 필요

○ 아동피해자를 위한 진술녹화제도의 개선

- 진술녹화제도는 생생한 진술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고 평가 되지만 녹화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 또한 검찰이나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, 피해아동은 수 차례 진술해야 하는 등 2차 피해를 받게 됨.
- 아동성폭력 ‘전문가 참여제 및 행동진술분석제’를 도입하여 피해아동 조사 시 초기부터 아동심리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 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도록 함.

○ 아동성폭력범죄자 출소정보통지제도 도입

- 아동성폭력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이후 출소하는 경우 출소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

자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.

- 경찰청이 교도소 수용자 중 법무부로부터 출소정보를 제공받아 재범방지대상자로 등록하게 되며, 경찰서장은 재범방지조치 대상자가 귀주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하는 등 정보를 파악하여 아동범죄 방지에 활용하도록 함.

한국여성정책연구원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, www.kwdi.re.kr)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,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-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,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,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.

보도자료 끝.